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63호 /12월 24일

중국의 내국민대우 실시현황과 외자정책 조정

1. 개요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 원칙에 따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內國民待遇 적용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국내의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상선 등에 대해서 국내기업, 내국인, 국내상선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호호혜의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투자활동, 자산관리 및 이와 관련된 법률집행이나 법률구제 등의 측면에서 국내기업이나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임.

2.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현황

-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음.
-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에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기하였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베를린 조약”, “세계관권협약” 등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인 및 중국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일정을 발표하였는바,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 부동산, 전신, 항공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원칙이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음.
- 상품무역 분야에서 외자기업은 2-3년 내에 수출입권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도 자율권을 누리게 됨.
- 조세 분야에서 유통세 개혁을 통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을 통일하고, 종업원도 동일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10%,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30% 이상을 유치하였음. 올해에는 전세계 1위의 외자유치국가로 부상하였음.

□ 한편 중국정부는 법률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일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국기업보다 유리한 超국민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초국민대우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같은 초국민대우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기간으로부터 “2년간 면세, 3년간 감세” 특혜를 제공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외자기업들이 투자를 허위신고하거나, 투자자금을 단기에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중국기업들이 외자기업과의 합작을 위장 신고하여 혜택을 누리는 등 위법행위의 여지가 많음.
 - 지역별, 산업별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특혜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유실문제가 야기됨.
 - WTO 규정 등 국제관례와도 모순이 발생함.
- 외자기업이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누리는 초국민대우 혜택은 <표 1>과 같음.

<표 1>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超국민대우 비교

	외자기업	중국기업
조세징수	생산재 수입관세 면제 소득세 면세 재투자 조세 환급	생산재 수입관세 부과 지방소득세 납부 재투자 조세 환급 없음.
경영관리	생산경영의 자주권 수출경영 자율권 사회적인 의무 부담 없음.	생산경영 자주권 아직 없음. 대부분은 수출 경영권 없음. 다양한 사회적의무 부담.
외환관리	획득한 외환 전액 보유 외환매매의 자유선택 외자기업에서 외환대출 가능	획득한 외환 일부만 보유 외환매매 자율권 없음. 외자은행에서 외환대출 제한
기업설립	법인 설립시 先설립, 後출자 출자액 분할 납부 관련 수속절차 간단	법인 설립시 先출자, 後설립 출자액 일시불 납부 관련 수속절차 복잡

-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중국기업과는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低국민대우라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규정과 모순됨.
- 광고 텔레비전산업, 신문산업, 무기생산산업, 무역금융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됨.

- 토지사용권, 전력이나 용수, 운송, 교통, 전신 등의 서비스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에 대해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 자동차, 항공, 전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함.
- 수출실적이나 수출상품의 수량에 대한 제한규정이 존재함.

3. 내국민대우에 대한 정책조정 전망

- ☐ 중국의 정책당국자, 전문가들은 내국민대우 원칙의 준수는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사회공익과 국가안전, 전통산업 보호, 특수한 자원활용 등의 측면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임.
- ☐ 따라서 향후 내국민대우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철폐함과 동시에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금후 중국정부는 국내 관련법률을 통일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구분없이 일원화해 갈 것으로 예상됨.
 - o 다만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개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는 존속될 것으로 보임.
- ☐ 한편 내국민대우 논의 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외자기업 중 초국민대우의 특혜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성장한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